

제2차 OECD 개발원조 정책대화 개최결과

“제2차 OECD 개발원조 정책대화”가 9.5~ 6간 서울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OECD DAC 비회원국, 중국, 브라질 등 신흥공여국, 세계은행, UNDP, ADB등 주요 국제기구 및 EC 등 총 40개 국가·기구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참여 대표단들은 원조효과를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공여국들이 자신의 특성과 비교우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분업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원조 시스템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필요한 제도 기반 구축 및 책임의식 및 주인의식을 거양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하였다.

I. 핵심 요지

-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DAC공여국과 신흥공여국은 향후 양측간 ODA정책협의를 정례화 하는데 합의하였으며, 신흥공여국들의 개발 경험 공유, 개발협력원조의 효율성 제고 방안, 공여국간의 원조 조화 및 남-남 협력(South-South Cooperation)과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구체화 방안에 대해 협의를 하였다.

II. 주요 결과

1. 제1세션(Lessons from Development for Development Cooperation)

- (발제 1: 박강호 외교부 개발협력정책관) 한국의 경제발전은 인적자원개발(HRD), 산업기반 시설 구축, 수출산업 육성, 대외원조의 효과적 활용 등 경제개발 전략의 효율적 시행을 통해

달성되었다고 설명한 후, 경제·사회발전을 위해선 정부의 효율성 제고와 국민들의 주인 의식 고양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 박 국장은 한국 정부가 중점협력국에 대한 3개년 국별지원계획(CAS: Country Assistance Strategy)을 금년 중 마련할 예정이며, 수원국의 필요와 한국의 비교우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국별로 단계적인 지원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발제 2 : Jerzy Pomianowski 폴란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 폴란드의 경우, 인권보장, 민주적 통치체제 구현, 시민사회의 참여 확대 등 정치적 안정 확보를 통해 경제개혁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 자유화를 달성하는 데 여타 국가들로부터의 물질·정신적 지원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시민사회의 참여가 주인의식의 함양에 기여했다.

■ **(멕시코)** 멕시코는 한국이나 폴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실적이 저조하나 최근 들어 거시경제, 무역 및 사회정책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 특히 'Tres por uno(Three for one)' 프로그램을 시행함으로써 개발원조의 효과와 동기를 제고하는 한편 수원국의 주인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중남미 국가들과의 개발경험 공유 및 원조협력을 통해 원조효과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 **(헝가리)** OECD 및 EU 유형의 원조협력을 통해 폴란드와 유사한 개발경로를 거치고 있다. 국제공동체의 유대관계가 강화될수록 개발경험의 공유는 개발원조의 효율성 제고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 **(스위스)** 한국과는 달리 스위스는 경제개발 초기에 치열한 국제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대외원조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 경제개발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한 역할 및 유치산업 보호 정책의 효과에 대해 관심이 많다.

■ **(한국)**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을 위해 인적자원 개발에 주력해왔다. 경제개발 전략의 성공 여부는 정부정책의 적실성과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자세에 달려 있다. 한국정부는 한국이 경험한 개발 관련 Know-how와 지적자산을 수원국에 전수하기 위해 이를 모델화하고 있다. 현재 우리 정부는 59개국에 원조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 원조 중 60%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원조지역의 다변화, 최빈개도국 지원정책 강화를 위해 향후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원조의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ADB) 신흥공여국의 경험이 선진국의 경험보다 개발도상국들의 경제개발에 더 도움이 된다. 신흥공여국들의 경제발전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른 편이며, 초기에는 주로 국가주도형 경제발전 전략을 구사하다가 점차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경제개발을 위해 중요한 것은 금융개혁에 필요한 법률 및 통치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다.

2. 제2세션(Capacity Development)

- (발제 1 : Carlos Miranda 미주개발은행 브라질 및 수리남 담당 집행이사) 능력개발의 주요 장애 요소로는 개발유인 제공 미비 및 안정된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제도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도국의 경제분야 능력개발을 위해서는 금융분야의 개혁에 필요한 제도 정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동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주요 원조기관들이 우선적으로 개도국의 금융분야 제도개선과 능력 개발에 주력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함이 필요하다.
- (발제 2 : Henri Raubenheimer 남아프리카 공화국 외교부 경제개발과장) 능력개발에 필요한 제도 정비를 위해서는 인력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개발의 혜택 및 능력개

발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미국) 미국정부는 테러리즘, 내란기도, 조직범죄, 마약밀매, 인신매매, 환경위해 등과 같은 위협요소들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위협하게 한다는 인식하에 MCA(Millennium Challenge Account)라는 전략을 수립하여 대외원조를 국가안보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화유지와 안보달성, 지속적 발전과 지구적 차원의 복리증진, 외교적 능력의 강화와 국제적 이익의 증진 등 4개의 목표를 대외원조의 주요미션으로 정하고, 상기 목표에 부합하며, 정부의 투명성 제고, 경제적 자유의 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개도국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대외원조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 (IMF) 제도를 단기간에 바꾸기는 어려우며, 제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이 핵심요소이다. 제도개혁을 달성하려면 일관된 전략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DAC 회원국들은 DAC 비회원국들에게 더 유연하고 포괄적인 태도를 견지하여 전반적으로 원조정책이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UNDP) 원조효과 제고, 능력개발 등은 범주화하기 힘든 분야다. 원조의 많은 부분이 누수되고 있으므로 원조정책의 집행과 모니터링을

보다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

을 것이다.

- **(한국)** 현재 공여국의 기술협력 프로그램이 주로 실무인력 연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이 있으나, 교육내용의 효과적인 응용 및 정책화를 위해서는 수원국 정부 고위간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 **(Richard Carey 세션 의장)** 아시아, 동유럽, 남아프리카, 브라질 등의 국가들은 성공적으로 경제개발을 이룩했으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직 개발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 성공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내적 학습과정과 외적 기술원조 과정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바람직한 제도 구축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집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당초 계획수립시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3. 제3세션(Managing Development Cooperation – How to Make it More Effective)

- **(발제 1 : Bruce Purdue 아시아개발은행 실적관리부장)** 개발원조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관리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수원국과 공여국 모두 개발원조의 효과적 활용에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수 있

- **(발제 2 : Morten Jespersen 덴마크 외교부 개발정책과장)** 개발원조의 효과를 제고하려면 공여국이 책임의식(commitment)을 갖고 원조에 임해야 한다. 또한 수원국으로 하여금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공여국과 수원국이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갖고 상호 협력한다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ADB)** 수원국 정부의 부패를 감소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어야 하며, 필요한 제도를 갖추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제도 정비가 선행되지 않으면 원조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은 불가능하다. 공여국간의 갈등은 공여국과 수원국간의 갈등보다 조화시키기 어려우며 이런 측면에서 오늘과 같은 정책대화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네덜란드)** 집행과 결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준비단계에서는 충분히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며, 성차별 철폐 등 일부 목표는 2015년까지 달성하기 어려운 MDG인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 **(멕시코)** 파리 선언(Paris Declaration)에는 동의하지만 멕시코의 경우, 원조의 규모를 측

정하기가 어려우므로 파리선언을 준수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한국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DAC 비회원 공여국들은 공여국인 동시에 수원국 입장이므로 이들의 원조규모를 측정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제4세션(Development Assistance Partnerships)

■ **(발제 1 : Koro Bessho 일본 외교부 국제협력 국장)** 개발원조 분야에서 효율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수원국 실정에 적합한 개발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책임의식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또한 DAC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공동으로 원조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DAC가 원조의 기준설정에 독점적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공여국들이 기준 설정 과정에 참여토록 논의를 유도하고 조직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발제 2 : Apinan Phatarathiyanon 태국 국제개발협력기구 부국장)** 태국은 남아공과 남-남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동 협력모델에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러한 협력관계의 기초는 상호보완성과 유대관계에 있으며, 개발원조의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수혜국의 참여와 주인의식이 필요하다.

■ **(뉴질랜드)** 취약국가들(fragile states)을 위한 지원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 다자기구들은 전문성과 경험에 근거한 원조에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한국)** 신흥공여국중 일부는 통계 및 평가분야 역량 개선을 필요로 하는바, DAC국가와 신흥공여국간 공동분석 및 공동평가 작업을 위해 협력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한국은 현재 독일과 공동 평가사업을 준비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5. 결 론

■ 공여국이 모두 참여하는 ODA정책회의의 정례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원조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공여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는 3각협력 및 다자개발협력체제를 활용한 ODA제공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선진공여국 그룹인 DAC을 보다 유연하게 개혁하여 신흥공여국의 요구와 필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다자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 빈곤 및 질병 퇴치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인프라의 구축이 요구되며 ODA뿐만 아니라 Aid for Trade를 통한 무역의 활성화도 필요하다.

- 금번 정책대화 개최를 통하여 최초로 다양한 공여국이 참여하는 원조정책대화가 개최되었는 바, 향후 동 회의가 지속 개최되어 공여국 간 원조조화·원조정책 협의의 정례화된 포럼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I. ODA 국제워크숍 개최

- 제2차 OECD 개발원조 정책대화와 병행하여 9. 6 14:30 ~ 18:15간 ODA 국제워크숍이 개최되었다. 금번 워크숍에는 국내외 ODA 전문가 및 학계 인사 약 150명이 참석하여 한국, 일본 및 OECD DAC 회원국 국민들의 개발원조에 대한 지지확보방안 및 시민단체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료: 주오이시디대표부]